

2008 | 5+6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



이제는 가닿을 수 없는 옛 시절의 아련함과
나지막한 한숨이 깃든 추억을 담아
하늘빛 머금은 잔잔한 강가에 띄워 보낸다.
그 시절, 향긋한 젊음과 고단함을 함께 했던
내 벗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나의 마음 어느덧 저 뱃길 쪽아 흘러가고 있다.



2008 Vol.02

Contents

04 기획연재 대통령 업무보고 외

행복한 사회

- 10 희망볼륨 up!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비스 기관이 되기를”
- 12 해피투게더 말핀 미미 씨의 즐거운 한국생활, 국경을 넘는 아줌마 파워
- 16 우리가 간다 협조와 이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현장조정회의
- 18 청렴예찬 “윤리실천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posco 기업윤리실천현장을 찾아서
- 20 바로 이 사람 한국전쟁 참전 ‘소녀병사’ 문인순 할머니
- 22 국민권익 도우미 “요양병원 간병인도 4대 보험 받아요”

즐거운 세상

- 24 즐거운 메시지 견디는 무게가 사랑의 무게입니다 - 신달자
- 26 오감여행 강원도 청정산골에서 만나는 원시림 여행
- 30 트렌드 읽기 싱글 여성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칵빈(Chick-bin) 현상
- 32 생활법률 119 불법 체포행위로부터 당당해지자!
- 34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음주측정기 오류! 면허취소는 부당!

- 36 ACRC 소식 국민권익위, 5월 2일 미션·비전 선포식 외
- 40 해외 반부패동향 유엔 보고서 “부정부패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 42 ACRC 카툰 부패신고 1398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권익위의 주요 행사 및 활동을 소개한다.

“훈령·예규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권익위, 5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5월 14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위원회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의 골자는 ‘훈령·예규·고시 등 1만여 건에 이르는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면 정비한다’는 것으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외부통제 없이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규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손대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권익위는 실천계획으로 우선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패신고 등의 데이터베이스 [DB](#)를 분석, 1만여 건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무총리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는다

명예국민권익자문회의 출범

법조계 · 학계 · 언론계 · 경제계 저명인사 11명 구성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2일 위원회 청사에서 법조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 및 전문가들을 명예국민권익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초대 명예국민권익위원으로 국민권익에 관심이 많고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사 가운데 □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 권영설 중앙대 법대교수 □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정기호 전 대법관 □ 주철기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등 11명을 위촉했다.

명예국민권익자문회의는 □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 □ 현안문제 발생 시 대책 방안 자문 □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협조 유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07년도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

윤리의식 개선 등 공로로 40명, 4개 단체 수상



Interview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한
김정수 투명협 사무처장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패는 그 주제 자체로 진보든, 보수든 방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공공부문의 부패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경제·사회 등에서도 부패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치색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참여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빌딩 대강당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패방지 업무에 기여한 개인 40명과 4개 단체에게 정부포상 및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시상식 중 가장 권위있는 국민훈장 목련장은 지난해 윤리의식 개선을 위해 활발한 시민활동을 펴고, 투명사회협약 체결과 이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김정수 사무처장이 수상 [좌측 인터뷰 참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APEC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TT국제투명성기구 등 반부패국제기구에 적극 참석해 한국 반부패 모델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

국민포장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의 이지문 부대표와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 거래의 근절에 기여한 공정거래위원회 유희상 부이사관, 정치인·고위 공직자 수뢰 등 부정부패 사건을 철저히 규명한 대검찰청 이광호 수사사무관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

-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 한국철도공사
-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 한국전력공사,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강화

대한변협과 업무 협약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30일 권익위 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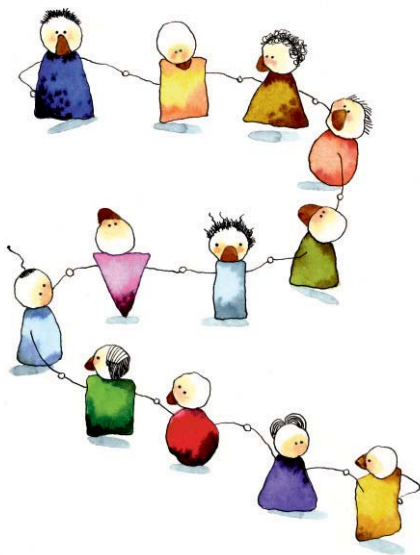
양건 국민권익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지원받아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권익위가 추진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사업 및 오지 · 낙도 등 소외지역과 외국인 노동자 · 결혼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행복한 사회

희망불룸 up!
해피투게더
우리가 간다
청렴예찬
바로 이 사람
국민권익 도우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비스기관이 되기를”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한데 통합되면서 새로이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월 29일 그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그리고 공공 부패 방지를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설립목적에 걸맞은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이 중요할 터. 이에 거리로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바람을 직접 확인했다.

글 * 사진 차영진



*

*** 윤태성(20, 학생)**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에게는 좀 생소한 존재입니다. 아직 새내기 대학생이어서 학업 밖의 것들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권익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이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국민이 권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박상훈(30, 직장인)**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를 들은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설립되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 주변을 둘러봐도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활동을 펼치는 일인 듯 싶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면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활동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 김세미(21, 학생)** 사실 아직까지는 국민에 대한 권익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마땅히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학생의 입장에서도 좀 더 권리가 많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 박정우(58, 자영업자)**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얼마 전에 설립되었죠?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즈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대로 정해진 일을 수행해야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권익에 대해 전반적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희(31, 뮤지션)**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겠구나 대충 예상되기도 하고요. 좋은 의미에서 설립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시점이다 보니 아무래도 염려가 앞섭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부패방지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다 성숙해진 국민의식에 보폭을 맞춰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 전춘성(22, 유학생)**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국민권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뉴질랜드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네요. 벌써 6년을 그곳에서 생활했으니까 제 얘기가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이 과거에 비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활상도 뉴질랜드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선진국으로부터 좋은 점을 많이 배우면 좋겠어요. 🌍

말핀 미미 씨의 즐거운 한국생활

국경을 넘는 아줌마 파워



결혼생활 17년 차의 주부 말핀 미미 씨가 머나먼 나라 콩고에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지 7년. 유창한 한국어로 “보통의 한국 아줌마랑 똑같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한국은 이제 남편의 나라가 아니라 고향 ‘콩고’와 같은 ‘내 나라’가 됐다. 아줌마 미미 씨는 초보 결혼이민자들에게 선배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국의 낯선 문화와 언어는 그녀에게도 그리 녹록치 않았지만 이해와 배려,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글 이명아 * 사진 김민정



남편 이현구 씨와 미미 씨의 다정다감한 모습

콩고의 미녀, 한국을 만나다 수원시 화서 시장에 가면 주부(!), ‘미미’ 씨^{36세}는 유명인이다. 그녀가 장이라도 보러 나오면 시장 아주머니들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농을 치기도 한다. 흔히 ‘내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과장해 말하지만 화서 시장에선 ‘미미를 모르면 간첩’이 상식일 정도. 미미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이들이 없고, 심지어 그녀의 집을 물으면 너도나도 앞장 설 태세다. 이처럼 한국에 온지 7년 만에 한국 아줌마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융합된 아프리카 콩고의 여인 ‘말핀미미’.

그녀가 한국과의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남편 이현구 씨^{43세}가 콩고에서 운영하는 사진관을 찾으면서부터다. 사진현상을 위해 사진관을 찾았던 미미에게 호감을 가졌던 이현구 씨가 3번 째 만남에서 미미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신했고, 1여 년의 교제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결혼을 통해 한국과의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미미 씨. 애초에 걱정했던 문화적 차이도 없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쳤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남이었던 남편과 미미 씨는 고민 끝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 미미 씨의 파란만장(?)한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미미의 파란만장한 주부생활 통통 튀는 명랑함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드는 미미 씨였지만 낯선 나라의 문화와 언어는 그녀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제사문화도 그녀를 가우뚱하게 했다. 그녀를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주변 시선은 어딜 가나 따라 다녔고, 남다른 그녀의 외모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그녀에게 상처로 다가왔다.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정했던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알츠하이머가 함께 온 것. 한국에 온지 1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갑작스런 시아버지의 와병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당장 병원에서 시중을 들어야 했던 미미 씨. 특히 시아버지의 속옷을 갈아입혀야 할 때는 어찌 할 바를 몰라 매번 남편을 호출했지만 남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땐 속수무책이었다. 미미 씨는 진심을 다해 시아버지의 완쾌를 빌며 간병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리고 미미 씨는 문득 한국 아줌마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아들 이건우(12세)와 딸 민지(5세)

이젠 나도 한국 아줌마 7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후 한국생활 적응에 힘들어 했던 모습과 달리 미미 씨는 여느 한국 아줌마들보다 더 바쁘고 적극적이다. 결혼이민자센터 ‘엠마우스’에서 한국어 선생님 활동을 하는 한편 3개월 전부터는 수원수출입관리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민원과 서류작성 등을 돕고 있다. “결혼 이민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병원에 가는 일이지. 병원을 어떻게 가야할지도 모르고, 한국어를 못하니 병원에 가도 어디가 아픈지 설명도 못하는 거죠.”

사실 결혼이민자센터에서의 만남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센터를 찾는 초보 이민자 주부들은 어린 나이에 맞선으로 결혼한 뒤 혈혈단신으로 남편을 따라 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남편과의 불화로 고생하는 어린 주부들을 볼 때면 여간 마음이 아픈 게 아니다. 미미 씨는 후배 결혼 이민자에게 우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열심히 배우라고 조언하는 동시에 한국을 자신의 고국과 똑같이 ‘내 나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한국 남편들에게도 ‘무조건 잘하라’고 주문한다. 낯선 땅에서 남편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여성들을 무조건 이해하고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것.

한국적응의 첩경은 이해와 배려 이젠 한국이 콩고처럼 편해졌다고 말하는 미미 씨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미미 씨가 지금처럼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까진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센터를 비롯해 이웃들의 도움도 필요했다.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그녀의 일상



진정한 한국 아줌마가 된 미미 씨. 이제는 모두가 내 이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결혼이민자센터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동료와 함께

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다. 한편 과거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형성했던 커뮤니티 등 민간단체 중심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국가 기관에서의 지원도 활발해져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적응을 돕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관리사무소의 경우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민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선·후배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 '명예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위촉해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세상의 모든 '차이'는 '같음'에서 태어난다. 국적·언어·인종·문화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의 외연과 깊이는 더욱 커진 '같음'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 이름을 세계화라 해도 좋고 다문화라 해도 좋고 노마디즘이라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의 마음일 것이다. 🌍



미미 씨가 한국어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04년부터 화성, 인천 등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현장민원상담'이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상담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 민원상담반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제도. 권익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통합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영·중·일 외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각각 개설해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적극 고쳐나갈 예정이다.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f Korea has been providing counselling service for expatriates since 2004, especially in regions like Hwaseong, Incheon inhabited with larg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he 'On-the-spot Counselling for Migrants', consisted of lawyers, certified administrators, chief officers and immigration experts, was launched to offer civil affairs consultation for foreign migrant workers and foreign wives who have hard time visiting the ombudsman center stationed in Seoul in person or getting counselling through the Internet.

In the meantime, ACRC also expanded an integrated on-line complaints service called 'Sinmungo (a big drum) for the People' on June 16 at www.epeople.go.kr to handle complaints, petition and proposals for foreigners in three different languages, Chinese, English and Japanese.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열쇠는 민원인과 해당 행정기관간의 의견 조율이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조정 또는 대안을 모색하여 양측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최근 권익위가 해결한 대전 엑스포 초교 민원사례와 인천대교 소음 민원사례를 통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해결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현장조정회의

협조와 이해 두마리 토끼를 잡다!



팽팽한 의견 대립도 화해모드로 전환~

[인천대교 소음 민원 해결사례]

지난 3월 6일 인천 남구 학익1동 1통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한국도로공사측을 대상으로 접수되었다. 내용의 요지는 '인천대교 연결도로건설로 인해 도로와 가까워지면서 도로공사 중은 물론 완공 후에도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됐으니 주택들을 매수해달라'는 것.

이들은 2005년 말부터 시행된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충돌을 빚



어왔다. 그동안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측에 자신들의 주택을 매수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보상법상 수용 근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 역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되자, 권익위는 문제의 쟁점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나섰다. 신청인인 마을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피신청인인 한국도로공사측의 의견 및 대안을 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평가 결과, 해당 지역은 공사와 무관하게 이미 소음과 대기질 항목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매수 보상은 어려우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동식 방음벽 및 고정식 펜스 설치, 소음유발 공사 때 주민들의 사전협조 및 양해,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토공작업 때 분진망 등을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측의 이 같은 조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그리고 준공 후 일조권, 조망권 등에 피해가 뻔히 예상돼 주민들과의 충돌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 권익위는 이동식 방음벽은 근본 대책이 아니며, 방음벽 설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방음벽으로 환경기준치 이내로 소음을 줄이기는 어려우며, 그 설치비용이 주택매수 비용과 맞먹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지난 4월 15일, 현장조정회의에서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측은 주민들의 주택을 매수보상하고, 주민들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 문제를 해결했다. 민원이 접수된 지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해결된 것이다.



민원 해결 위해 두 발로 뛰니다!

[엑스포 초교 민원 해결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의 현장조정회의는 지난 5월 28일 대전시청에서 다시 열렸다.

이날 조정회의의 주제는 무산 위기에 처한 엑스포초등학교 설립 건. 조정회의에는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대전시장,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입주민, 토지공사 및 스마트시티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지역의 큰 현안인 학교 설립 문제가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시민과 관련 업체 그리고 기관간의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낸 결과로,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 엑스포초등학교 설립 문제는 엑스포지구내 스마트시티 입주 가구 수가 줄면서 발생되었다. 엑스포초등학교는 애초 13학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입주자가 1100가구에서



708가구로 줄면서, 재학생수는 209명 6학급으로 줄어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진 것.

또 학급이 줄면서 학급당 정원이 35명으로 늘어난 데다, 토지공사 측에서 학교용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려하자,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학교 인근에 교육시설이 아닌 상업단지가 웬 말이라는 것이다. 교육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던 입주자들은 더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2월 권익위에 진정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5월 28일,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게 됐다. 과연 그 5개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일까.

지난 1월, 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안을 제시했다.

우선 토공은 학교용지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사업시행자인 스마트시티에 적정가격으로 매각한다. 둘째, 스마트시티는 토공에서 사들인 토지 전체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무상기부한다. 셋째, 대전광역시는 스마트시티로부터 예전에 징수해왔던 학교용지 부담금 20억원을 다시 스마트시티에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합의안 제시 후, 권익위는 5월 28일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스마트시티 건설사는 토지공사로부터 학교 용지 9084㎡를 매입한 뒤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또 대전시는 건설업체에서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보면서 문제의 종지부를 찍었다. 🌈

포스코는 기업윤리실천사무국 **사회공헌실 소속**을 설치해 체계적인 기업윤리 교육과 제반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매년 새해 첫날,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CEO가 보내는 윤리실천 메시지를 읽고 나서 각자가 실천서약서에 윤리규범 준수서약을 한다. 윤리규범 선포 첫 해인 2003년에는 기업윤리의 인식을 확산하고, 2004년에는 제도를 보완, 2005년은 윤리규범 실천력을 강화해 2006년 이후엔 윤리실천을 기업문화화 하는 등 매년 실천단계에 따라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차츰 직원들의 윤리실천문화가 정착되자 포스코는 한 차원 높은 '윤리실천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윤리실천프로그램은 윤리실천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1년 주기 활동 프로그램이다. 각 부서별로 자가진단과 토론을 통해 업무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리스크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이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윤리실천프로그램은 윤리경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2006년에 (사)한국투명성기구에서 주관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을 받았다.



직원들과의 윤리 상담 모습

일벌백계도 윤리경영의 하나

윤리규범은 철저히 지키고 부정비리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포스코는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며,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한다. 물론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철저히 지키는 것은 신고자의 확실한 신분보장이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신고자가 누군지 수소문하거나 찾으려는 시도도 금지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분이 누설될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신분보호가 가능한 감사실이나 기업윤리실천사무국에 근무하도록 배려한다. 또한, 관련 서류에 이에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며, 운영부서 임직원들은 '신고자 신분보장 서약식'을 갖는 등 제보자 신분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리규범과 관련된 상담과 신고는 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업윤리상담센터 [Help line](#)와 신고센터 [Hot line](#)는 포스코 직원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거래물량을 제한하거나 심한 경우 거래 중지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처음 거래를 하게 된 회사에 대해 계약 전에 반드시 위와 같은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개별적으로 기업윤리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포스코의 윤리경영 필요성과 윤리규범 구성 체제, 기업윤리 실천활동'에 대한 설명과 '윤리실천특별약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등 기업윤리 제도의 소개로 이루어진다. 기업윤리실천사무국 관계자는 "기업윤리 설명회를 통해 신규거래사도 단시간에 포스코의 윤리경영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 비윤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자와의 윈-윈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선물반송센터

선물반송제도 등 톡톡 튀는 기업윤리문화 돋보여

포스코가 최초로 도입한 '선물반송센터'도 신선한 반향을 불러왔다. 이 제도는 직원의 제안을 실제로 도입시킨 경우다. 선물반송센터에서는 명절을 맞아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접수한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마음만 받겠다"는 내용의 반송 스티커를 붙여 회사 비용으로 발송처로 되돌려 보낸다. 반송자의 편의까지 배려한 이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접수된 선물은 사회단체에도 기증할 수 있다. 발송인이 불명확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하기 어려운 물품은 사내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고, 수익금은 사회봉사기금으로 기탁한다. 기업윤리실천사무국 관계자는 선물반송에 얹힌 일화를 들려주었다.

"어느 직원 자택으로 사과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이런 경우 저희 회사와 연계된 커서비스를 불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송인 주소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단체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며 곧바로 보냈더니군요. 노인복지관으로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청송에 사는 형님에게 전화를 받았대요. 보낸 사과 맛있었냐고요. 하하."

윤리규범 선포 5주년을 맞아 이구택 회장은 회사이익과 기업윤리가 상치될 때는 윤리가 우선이라고 주저 없이 천명하며, 이를 경영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선언했다. 이제 포스코는 탄탄한 윤리준수의 기본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전력하는 한편 오늘도 영속기업을 향한 힘찬 행보를 내딛고 있다. 🌈



“소녀병사를 아십니까?”

한국전쟁 참전 ‘소녀병사’

문인순 할머니



“노병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국가가 어려울 때 어린 여학생의 신분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반세기가 지나도록 찬밥신세인 것은 너무나 슬픔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나아갔다.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국전쟁 당시, 펜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나이 어린 소년·소녀병사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제주도의 꽃다운 소녀,

해병대 4기

여군 문인순

‘소녀병사’

58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 때도 어린 나이에 총을 메고 최전선에서 싸운 소녀병사들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1993년 등단해 옥주^{玉珠}시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문인순⁷⁵·제주시 용담2동 할머니이다.

지난 6월 12일 제주도에서 만난 문 할머니는 “징집연령도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나이에 총을 메고 최전선에서 싸운 소년·소녀병들이 이렇게 찬밥이 되어도 되느냐”고 억울해 했다.

“군번 91073 해병대 4기 여군 문인순”

문 할머니는 “소년소녀지원병의 실체를 인정해 달라”는 6.25참전전우회의 민원을 받고 제주도로 날아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마주 앉았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단정하게 자른 머리와 정갈한 군복을 입은 할머니는 해병대 4기 군인다운 모습이였다.

그녀가 징집된 것은 6.25 전쟁이 발발하고 2개월 여 뒤인 1950년 8월 30일. 당시 제주여중에서 한창 공부 중이던 17세의 꽃다운 나이였던 그녀는 40일간 훈련을 마치고 소년병과 같이 상륙함^{LST}을 타고 전선으로 향했다. 낙동강 전선으로 향한 소년병들과 달리 소녀병들은 경남 진해의 해군통제부에 도착했다. 문 씨는 이곳에서 10개월 가량 복무를 했다. 당시 복무를 했던 제주여중생 126명 가운데 4명은 장교로 가고, 5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졌으며, 72명 중 24명은 해군본부에서 근무하고 그녀를 비롯한 48명은 진해통제부에 배치됐다.

제주도의 꽃다운 소녀, 전장에 투입되다

“1951년 5월 20일 제대하기 까지 해군본부 인사국장실 판잣집에서 10개월 남짓 복무했어요. 대부분의 소녀병사들은 간호병과 행정병으로 근무했죠.”

당시 어려웠던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서였을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 할머니는 간간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제대 후 때를 놓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소년·소녀병사들은 배우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은 채 비참한 생활을 했다”며 “소년·소녀병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희생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17세에 국가를 위해 당당하게 전쟁에 참가했던 군번 91073 문인순 노병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까지도 ‘소녀병사’란 단어가 우리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소년·소녀병들을 위한 위령탑, 위령비 조차 건립돼 있지 않았다. 교과서나 국방전사에도 소년·소녀병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정작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한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였다.

“이제라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희생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쳤던 저를 비롯한 소년·소녀병사들의 소원입니다.”

권익위는 소년·소녀병사들의 문제를 조사·검토한 후 지난 6월 24일 국가보훈처, 국방부에 이들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현충시설도 건립토록 권고해 수용의사를 통보 받았다. 부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

소년·소녀 지원병?

소년지원병은 현재 그 범위를 자원에 의하여 참전한 자로 한정할 것인지, 징발·징집 또는 동원에 의하여 참전한 자까지 포함할 것인지와 연령을 몇 살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 이 의결서의 소년지원병은 ‘18세 미만의 병역의무가 없는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국제연합군 또는 전투경찰대에 지원 입대해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를 가리키며, 이들 중에는 소녀병, 학도의용군도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도 4대 보험 받아요

ㅣ 권익위, 간병인 처우개선 권고

일러스트 양승용

“○○요양병원에서는 공동간병인 2명이 20명 넘는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환자를 목욕시키거나 체위를 바꾸어 주다가 노인환자가 골절 등 사고를 당할 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어요.”

“1인당 맡은 환자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유니폼이 땀에 젖도록 뛰어야 합니다.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고 고단한 게 우리 간병인이예요. 환자를 잘 돌보고 싶지만 맡은 환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충분한 시간, 인력만 보장된다면 환자를 내 부모 내 형제 같이 돌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 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던 것을 최근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의 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아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4대보험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18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 노동부에 위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요양병원 간병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외에도 ▲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인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도 적용받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는 ▲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로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에 노동부는 ▲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는 실태조사와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간병인 관련 유류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는 특별지도 단속후 지침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이나 파견업체가 아닌 유류직업소개업을 통해 개인 **환자**에게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에는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요양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에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





즐거운 세상

즐거운 메시지

오감여행

트렌드 읽기

생활법률 119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ACRC 소식

해외 반부패동향

ACRC 카툰

견디는 우게가 사랑의 우게입니다

글 신달자 • 일러스트 홍종모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질서에서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것은 개인 존재의 의미이다. 제 아무리 문화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다고 해도 한 개인의 존재가 무시되고 그 존재의 의미가 압박당한다면 그것은 기본질서가 망가진 형태일 것이다. 거대담론이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존재로부터 스스로의 만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며 가정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 만족도와 이익이 중시될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가령 나는 아주 작은 문제로 딸아이와 부딪칠 때가 있다.

“중간 밸브를 또 잠그지 않았잖아.”

출근하는 딸이 획 현관으로 나가며 내게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감기 기운에도 겨우 일어나 주스를 갈아 화장대까지 가져다 준 것에는 한마디 없고, 잘못된 지적하고 나가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나이 때문인지, 이런 작은 문제로 나는 마음을 다치고 세상이 재미없어진다. 주스가 맛있다고 한마디 하고 나서 “밸브는 또 잊었네요.” 하고 애교스럽게 말하면 어디 덧나?

엄마와 딸이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어쩌면 더 가까운 사이인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로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받는다.

나는, “네가 그걸 했던 말이야”, “너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도무지 네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알보는 말을 쉽게 흘린다.

가족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





가정이 행복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것이 소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개인 권익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무게야말로 이 국가를 들 수 있는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변명을 하자면 나는 어머니가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딸이 잘되기를 바라니까 말은 그렇게 조금 내려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게 어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인가. 나는 요즘 내 딸에게 말조심을 한다.

가족이란 참 어려운 관계다. '가족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미 그 어려움을 체험했기 때문이라.

가족은 서로를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도 인정하지 않고, 알고 있는 만큼만 보게되는 경향이 있다. 작은 변화에도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응원하고 그래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가족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었다. 서로 사랑했음에도 맞서면 서로 얼굴을 붉혔다. 내 남편은 무엇을 찾으려면 1초안에 딱 앞에 내 놓아야 한다. 우물우물 찾고 있으면 옆에 따라 다니며 "정신은 어디에 두었느냐", "길거리에 흘리고 왔느냐", "당신의 정리정돈은 앞집 개보다 못하다는 등" 인간비하의 알보는 소리를 해 결국은 싸움이 되곤 했다.

정리정돈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약점이다. 난 그것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리정돈까지 잘하면 내가 저하고 같이 사나? 때론 화가 나서 그렇게 속으로 빈정대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서로의 화해와 순조로운 부부대화를 위해 와인을 준비했다.

"웬 와인이야."

"우리도 와인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러자."

"대화 같은 소리하지 말고 살림이나 잘해"

겨우 두어마디 오고가다가 우리는 끝내 다시 싸우고 말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 다 "우리는 안돼" 하고 절망을 씹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나만 불행하고 손해 보는 여자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건강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의 소중한 지점에서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이 살았다. 지금은 그런 부부싸움도 그림자.

왜 우리는 좋은 것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생채기를 내어 왔을까. 가족에는 그리고 사랑에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상처를 만들어 가

며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구식생활법의 사랑법이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자식을 "나가 죽어라"고 하거나 "저 웬수 썩 없어지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라고 해도 그거 거짓말인지 다 알고 헤हे 웃곤 했었다.

누구도 나가 죽는 아이도 없고 없어지는 경우 또한 없었다. 과장법이 곧 사랑이라는 통용어로 사용하던 시절 욕은 오히려 끈끈한 애정의 타액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요즘 어머니들이 딸에게 나가죽어 라고 하면 정말 나가 죽지 않겠는가. 애정법도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변화되었다.

'나가 죽어라'고 하면 '나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며 더 끈끈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가족이 행복하면 하는 일도 잘 풀린다. 어느 회사에서는 가정행복프로그램을 짜서 아내에게 편지도 쓰고 부인을 회사에 모셔와 대접도 하는 등 가족과의 행복을 회사일과 병행하는 것을 보았다.

가정이 행복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것이 소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개인 권익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무게야말로 이 국가를 들 수 있는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가겠네”

과거 불일을 보러가거나 군 생활을 하러 강원도 인제나 인제군 북면의 원통리로 가는 사람들이 탄식처럼 내뱉던 소리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이 곳이 얼마나 외지고 드나들기 힘든 곳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제에는 설악산을 비롯해 응봉산, 방태산, 점봉산과 같은 험준한 산악들과 이 산자락 속에 깊게 패인 수많은 골짜기들이 때 묻지 않은 순수의 모습으로 잘 간직되어 있다. 인제 땅의 깊은 속살, 삼둔오가리는 사람의 발길이 겨우 닿을 수 있는 남한지역의 마지막 오지다. 인제 내린천을 거슬러 삼둔오거리 지역의 볼거리들을 소개해 본다.



강원도 청정산골에서 만나는 원시림 여행

삼둔오거리

“도시인들의 일상탈출 일번지”

글 남정우 * 사진 남정우, 임재철



전쟁과 역병도 비켜간 은둔처, 삼둔오거리

조선시대의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심승지지(勝之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심승지이란 전쟁이나 전염병, 흉년 등에도 끄떡없이 건널 수 있는 전국의 길지 열 군데를 말하며 이와 관련해 강원도 산골짜기의 삼둔오거리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삼둔은 홍천군 내면의 살둔, 월둔, 달둔이고, 오거리는 인제군 기린면의 연가리, 명지거리, 아침거리, 명가리, 적거리 인데, 연가리, 명지거리, 아침거리, 명가리, 적거리로 해서 사거리라고도 부른다. 둔이나 거리는 모두 밭을 일구는 평평한 땅을 뜻한다.

삼둔오거리는 사방에 험준한 산들이 둘러쳐져 견고한 자연성곽을 이루어 바깥 세상에 노출이 안 되는데 그 안에는 경작할 땅과 물이 있어 온 세상에 난리가 나도 능히 숨어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전쟁 때에도 평안도나 함경도 사람들이 찾아들어 한때는 아침거리골 안에 수백 명의 화전민이 터를 닦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울진, 삼척 무장공비사건 뒤로 모두 떠나고 이제는 두어 가구만 남아있다.

아침거리란 아침에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치고 금세 저버릴 만큼 첩첩산중이라서, 또는 밭떼기가 하도 작아 아침나절에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한다. 아침거리골은 오거리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이다. 삼둔오거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아침거리골은 인제군 기린면의 방태산(1,435m)과 주억봉(1,443m), 구룡덕봉(1,388m), 가칠봉(1,240m)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산맥의 북쪽에 형성된 깊은 계곡이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던 아침거리골은 몇 해 전부터 오지여행 매니아들이 찾아들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맑은 물과 풍성한 원시림이 펼쳐진 계곡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청정한 비경을 지니고 있다. 일급수의 물에는 열목어가 노닐고 수달, 족제비, 하늘다람쥐 같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동물들도 만날 수 있다. 대기가 가장 맑은 곳(94년 환경부), 남성 최장수 지역(2002년 서울대 체력과학노화연구소)이다. 아침거리골에서 오지 트레킹코스로서 알려져 있는 구간은 조경동 다리에서 갈터에 이르는 약 7km 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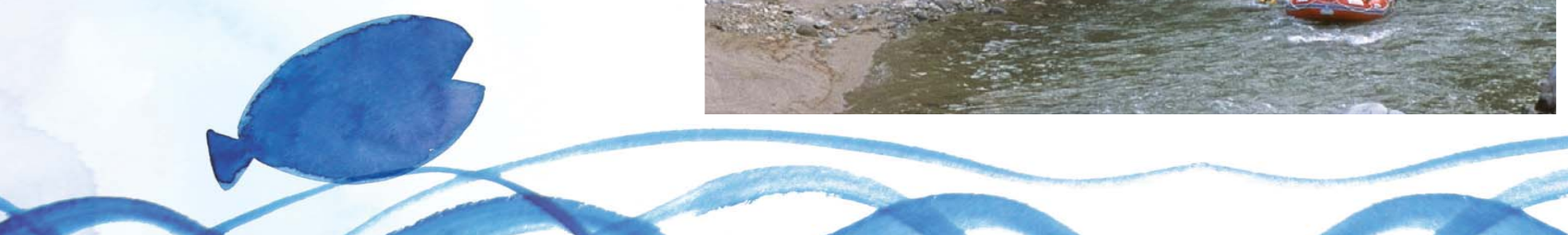




무성한 숲과 험한 바위, 칼 같은 산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는 내린천 모습



내린천이 언제 읊으로 흘러드는 궁동리
부근은 래프팅 코스로 유명하다.



대기가 가장 맑은 곳, 남성 최장수 지대

조경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동약수를 들린다. 방동약수는 삼둔오거리 중 적가리골에 위치한 약수이다. 워낙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어 예전에는 정말 절실한 사람만이 찾았다고 한다. 방동약수는 1670년 즈음 심마니에 의해 발견됐다. 무색투명한 광천수이며 철분, 망간이 함유된 탄산수여서 설탕만 넣으면 그대로 사이다가 된다. 방동약수가 있는 방동리 뒤편 산판길을 어렵사리 넘어 다다른 조경동에는 조경분교와 손바닥만 한 조막 밭, 텅 빈 집 몇 채가 덩그러니 남겨져 옛 화전민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침 다리 밑에서 마을 사람 세 분이 오수를 취하고 있었다. 이곳 조경동에 거주하는 인구의 전부인 듯싶다. 낯선 기척에 잠깐 농부에게 길을 물었다. 지나온 길이 고생스러워 다른 길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지도에 보니 구룡덕봉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던데 그쪽 길이 조금 편한가요?”

“방동에서 넘어 왔는데요? 지금 온 길은 고속도로지. 구룡덕봉으로 가는 길은 지방도래요.”

워낙 험한데다가 지난 수해 때 다리가 무너져 내려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열은 탄식에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묻지도 않은 말을 한마디 더 전한다.

“요즘 물가에 뱀이 많아요. 꼭 발목까지 오는 신발을 신고 내려 가드래요.”

열은 탄식이 짙은 탄식으로 바뀌었다.

조경동 다리 밑을 내려서며 본격적인 계곡 트레킹이 시작되었다. 좁은 협곡의 구비진 산모퉁이를 돌 때마다 물색과 풍광이 수시로 변했다. 인적 하나 없는데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조바심이 들었으나, 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계류를 건다보니 마음이 스르르 녹아들었다. 하루부근에 이르러 뜻밖에도 사람을 만났다. 물안경을 쓰고 작살을 든 채 물고기를 잡고 있던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슬쩍 다가가보니 엉성한 도구에 비해 제법 잡은 것 같았다. 고기 이름을 묻자 열목어라 했다. 천연기념물인데 잡아도 되냐고 물었더니 빙긋 웃기만 한다. 조경동 다리로부터 갈터 까지는 세 시간이 넘게 걸렸다. 직선거리로는 7km이지만 미끄럽고 구비진 물길을 건다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자연 속에서도 시간을 가늠해야 하는 도시사람의 비애와 사람 사는 안락한 공간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방동약수

인제의 젓줄과 숨줄, 내린천의 매력

오대산^{1,563m}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내린천은 홍천군 내면 동쪽의 소계방산^{1,490m}에서 발원하는 계방천과 남쪽 홍정산^{1,277m} 기슭에서 발원하는 자운천, 방내천을 주 지류로 시작되어 인제 땅으로 접어들다. 다시 인제의 동쪽 지류인 방태천, 상남천을 합류하며 인제읍을 지나 소양호로 흘러든다. 강원도 속살의 천들이 흘러 모인 내린천은 때 묻지 않은 야생의 강이다. 1급수에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산천어와 열목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강이며 수달, 비오리와 같은 흔치않은 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내린천 상류 곳곳에서 열목어를 볼 수 있지만 특히, 내면 광원리의 최소폭포 부근에는 팔뚝만한 열목어들이 3m 높이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내린천은 여름에 각광받는 강이다. 칼 같은 산과 산 사이를 휘돌아 흐르는 감압곡천이지만 군데군데 모래톱과 솔밭 등이 자리하고 있어 물놀이로 여름더위를 식히기에 더없이 좋다. 이 때문에 천 곳곳에 유원지들이 즐비한데 하류의 다락구미, 피아시 유원지, 중류의 황소, 서리, 공동 유원지, 상류인 상남면의 미산계곡, 진동계곡 등이다. 미산계곡 끝에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또 하나의 약수를 만난다. 개인산 약수다. 방동약수와 마찬가지로 위장병,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 한편 내린천은 레프팅의 명소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국내 레프팅 대상지 중에서도 최대 유속을 자랑하며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 많아 근래에는 국제 레프팅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

싱글 여성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치킨(Chick-bin) 현상

글 박주연 뉴스메이커 기자 • 일러스트 홍종모

스스로 긍정적으로 채찍질하는 여성들

치킨(Chick-Bin) 현상이 뜨고 있다. 치킨은 젊은 여성을 뜻하는 속어인 '치(Chick)'에 '비즈니스(Business)'와 '인베스트먼트(Investment)'를 더한 용어다. 치킨의 의미는 현재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좁게는 젊은 여성을 위한 재테크와 자기계발서를 의미하고, 넓게는 젊은 싱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취향을 직접 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치킨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꾸준한 자기 계발과 재테크 능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 여성이다. 속속 등장하고 있는 다채로운 상품도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여성이나 이용이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티가 연결된 여행상품, 스파, 뮤지컬이나 오페라와 같은 문화상품, 금융상품, 그리고 방법과 생활 편의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주거공간 등 이들을 구매하려면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한다.

20대 중반~30대 여성들이 자기계발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태생적 조건과 사회적 부추김이 맞물린 당연한 현상이다. 이들은 문화개방 1세대, 배낭여행 1세대, 인터넷 1세대다. 제일기획이 200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2635세대}로 명명된 이들의 사고방식은 유행에 민감하거나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습에 관한 진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또 '우리' 보다는 '나'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가를 중시하고 돈에 민감하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IMF 외환위기도 이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쳤다. 취업난이 심한 데다 취업을 하더라도 언제 직장에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 부단히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또 미래에 대한 일종의 안전판으로 재테크를 통해 돈이라도 묵직하게 벌어들여야 한다는 아무진 생각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똑똑'한 여성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 왔다. 수년 전부터 사법시험을 포함해 상당수 시험의 수석자리를 여성들이 꿰차고 있고 언론계, 재계, 의료계에도 여성 전문 인력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지 오래다.



척빈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젊은 여성을 위한 재테크와 자기계발서, 또는 젊은 독신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취향을 비즈니스에 접목한 시킨 것을 말한다. 오늘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척빈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력이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우리 사회의 한 얼굴이다. 남자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서기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척빈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상품 속속 등장

이를 증명하듯 국내에서도 싱글 커리어우먼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이 선보이고 있다. 그녀들을 위한 기업의 구매 작전은 패션, 화장품업계 뿐 아니다. 그동안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여기지 않았던 금융, 자동차, 디지털통신 업체들도 그녀들을 위한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백화점마다 젊은 감각의 명품 브랜드를 입점 시키고 '커리어우먼 클럽'과 같은 직장 여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그 일환. 또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화장품, 생활가전 등 여성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쉬 앤 스타일 펀드'를, 국민은행은 '명품 여성통장', '삼성 투자미인 자산배분 혼합형 펀드'를 내놓는 등 금융권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최근에는 프론트데스크 서비스부터 방법서비스, 청소관리 등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센터를 포함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인 레지던스가 여성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커리어우먼들의 빨간 경보음, 척빈 홀릭

한동안 언론매체에는 '골드미스'라는 말이 유행처럼 오르내렸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내어나 탄탄한 직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신생활을 즐기며 자기계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싱글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언론은 골드미스의 조건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 전문직 종사자, 연봉 4천만 원 이상, 아파트 혹은 개인자산 8천만 원 이상, 취미는 골프나 해외여행'이라는 구체적인 꼬리표까지 '친절하게(?)' 달았다. 이는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갈증과 목표를 갖게 했다. 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행여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또는 커리어우먼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척빈 홀릭'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똑똑한 여성이라면 물질적 축적 보다 더 중요한 부는 정신적인 수양을 통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겨두고 살지 않을까. 🌈



요즘에는 다짜고짜 길에서 범인을 체포하거나, 항의하는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막무가내식 체포행위가 유행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에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에서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글 황선익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일러스트 양승용

불법 체포행위로부터 당당해지자!



『A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이다. 그는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들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장에 서 체포되었다. A는 수사기관으로 호송되던 중 자동차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외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A의 행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상해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이 유,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경찰관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즉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인 절차를 어기면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판결에서 확립된 ‘미란다원칙’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란다원칙이란, 묵비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수사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다. 10대 소녀를 납치·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미란다라는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묵비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자, 미연방 대법원이 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두번째는, 신체구속과 관련한 권리는 외국인**그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초국가적이고 자연적이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당당하게 손해배상 청구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하게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및 가해자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한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과연 언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의 불법한 체포와 자백강요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은 “뇌물사건을 담당하는 1심 법원이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면 그 때 긴급체포가 불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성 유무는 형사재판 증거자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가 불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2심과 3심에서 계속 다투어졌다면 1심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1심 법원에서 긴급체포가 불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2심과 3심에서 계속하여 불법성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지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소멸시효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출발점이 늦추어져 그 만큼 권리구제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단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가 나왔다면 운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음주측정이 잘못됐을까?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한 남자의 억울한 사연이 접수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알코올 농도 0.5%라는 사망수치가 나와 면허취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위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측정 오류로 인한 면허취소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남자의 사연.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일러스트 양승용

음주측정기 오류! 면허취소는 부당!

신뢰할 수 없는 수치로 인한 면허 취소는 위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수치가 잘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했다.

지난 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심모 씨는, 부주의로 인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그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와 50여 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5%로 면허가 취소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0.5%라는 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사망자에게 면허 취소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 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계이므로 심 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로 결론지었다. 또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심 씨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 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는 이상이 없으며, 심 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단속 당시 심 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 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 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혈중알콜농도 0.5% 면허취소, 사망자에게 면허취소를 한 것과 진배없지 않을까.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 변화 | BAC (혈액 g/100ml 또는 호흡 %) » 단계 » 임상적 증후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01 ~ 0.05 BAC

- 임상적 증거 불충분
- 일반적 관찰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행동



*0.03 ~ 0.12 BAC

- 다행감(행복감)
- 가벼운 행복감, 사회성, 말이 많아짐, 자신감 증가, 억제력 감소, 주의 · 판단 · 통제력의 감소, 감각운동기능 손상시작, 손가락 운동감사 효율의 저하



*0.09 ~ 0.25 BAC

- 흥분
- 정서적 불안정성, 비판적 판단의 저하, 지각 · 기억 · 이해력의 손상, 감각반응감소, 반응시간 증가, 시력 · 섬광회복력의 감소, 균형유지능력 상실, 졸음



*0.18 ~ 0.30 BAC

- 혼동상태
- 방향감각 상실, 심리적 혼란, 어지러움증, 과장된 정서 상태, 시력 및 색깔 · 운동 · 형태 차원의 지각의 혼동,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혀 꼬브라짐, 무감각, 무기력



*0.25 ~ 0.40 BAC

- 무감각 상태
- 일반적 무력(감), 운동기능 상실에 근접, 자극에 대한 반응의 현저한 저하, 자제력 상실, 의식 없음, 수면 또는 무감각 상태



*0.35 ~ 0.50 BAC

- 혼수 상태
- 완전한 무의식 상태, 반사가 거의 없어지거나 억제될,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혈액 순환 및 호흡기능의 손상, 사망 가능성



*0.45 + BAC

- 사망
-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

ACRC NEWS

● 국민권익위, 5월 2일 미션·비전 선포식

국민고충 처리와 부패방지·행정심판 업무를 총괄해 지난 2월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새 미션으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으로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선정했다.

권익위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미션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공공부문의 반부패 체계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의 비전을 통해 5년 뒤인 2012년에는 세계 으뜸조만 기관을 선도하며, OECD 중위권 수준의 청렴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익위는 기존에 별도로 이루어지던 옛 고충위의 국민권리구제업무와 옛 청렴위의 국가청렴도 향상 활동, 옛 국무총리행정심판위의 행정 정송업무 등을 통합·처리하는 종합 권익구제기관으로, 국민이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다니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마련했다.

● 예방접종 안해 아들 잃은 부모 권익위에 민원... 국방부 예방책 마련

아들이 군복무 중 유행성출혈열로 사망하자 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인들의 유행성출혈열 예방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유행성출혈열 예방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모부대에서 2007년 11월 유행성출혈열로 사망한 병사의 부모가 낸 고충민원을 접수, 국방부에 유행성출혈열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 및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 장병의 유행성출혈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기록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군 장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군의관 교육 강화, 교육·홍보자료 배부 등 군 유행성출혈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강원도 현장 애로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8일 강원도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임동화물터미널청사 4층), 29일 삼척시청, 30일 영월군청에서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다음 달인 6월 26일에는 전남 보성, 27일에는 장흥지역에서도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안내했다.

중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직접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현장민원상담은 그동안 농촌이나 도서지역 위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과 중증 장애인을 위해 직접 가정방문 상담도 병행했다.

종전의 고충위와 청렴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앞으로는 종전의 일반 고충민원 상담 외에 부패신고, 행정심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국민권익이동상담반'으로 개편·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종합상담을 펼치게 된다. 전북(7월), 경남(9월), 충남(10월), 강원(11월) 등의 현장상담 일정이 예정돼 있다.

● 병역 면제자에게 민방위 통지 발부는 부당한 처사

교통사고로 지체하지 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발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해당 직장대가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3년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민원인 박모 씨. 병무청으로부터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이후 일반 기업에 취업했으나 지난해 2007년 1월 1일부로 민방위 대원에 편성, 경기도 모 시청 관할의 직장 민방위대로부터 2008년도 민방위 훈련 통지서도 받게 되었다. 박 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6급 지체하지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민방위 대원을 관할하는 경기도 모 시청은 민원인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의 업무과실로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직장 민방위대는 민원인에게 발부된 소집 통지서를 즉시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 부패행위 신고자에 4,935만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후 처음으로 5월 21일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게 총 4,935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부패행위 신고로 총 2억 9,537만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사건은 ▲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 요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 관련 등 3건이다. 정부출연 지원자금 횡령 사건은 모 진흥원으로부터 선박용 기계장치기술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이미 외국에서 용도 폐기된 기술을 직접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속여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비리이다. 이 부패행위 신고로 기업이 횡령한 정부출연금 2억6,194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4,267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또 권익위는 진로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환수시키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8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동사무소 직원 11명이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부당수령 한 것을 확인, 총 651만원의 돈을 전액 환수시키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액수의 20%를 지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1989년 이전 무허가 건물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일동의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1987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민에게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명일 근린공원의 사업시행자인 강동구청장은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1987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인 민원인에게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으며, 대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 강동구청장이 근거로 삼은 서울시 정비조례 및 규칙은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하는 조례나 규칙이 아니며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 근거를 잃는 이주자들에게 대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 민원인의 건물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건축물이며, ▲ 민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07. 9. 13) 이전인 1991년 11월부터 민원건물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 민원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 단지의 유치원 증축... 신고만으로 가능

공동주택 단지안에 있는 유치원이 급식시설 보완을 위해 증축을 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이 급식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증축하게 될 경우 건설당시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만 증축할 수 있도록 된 현행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라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2007년 6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조리실이 없던 유치원은 3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내 유치원)의 증축을 하려면 건축당시 당초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축을 해야하는 많은 유치원들이 조만간 조리시설 보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관련법령이 이를 제한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하게 된 것이다.

● 이장^{里長} 수고비 등 모곡^{募穀}제 관습 근절하라

아직까지 일부 농촌에 남아있는 이장 수고비(일명 모곡^{募穀}제)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농촌마을에서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등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만들라고 지자체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장 수고비는 과거 이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때 이장이 민원 심부름이나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주민들이 봄·가을에 곡식을 거둬줬던 것으로,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통리장 경비 등으로도 불린다.

권익위는 모곡제가 준조세적 성격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 지자체 관련 조례에 별도로 ‘금품수수의 금지’ 조항과 통·리장 해촉 사유에 ‘통·리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ACRC NEWS



담배재배 농민도 재난피해 때 이자감면 해줘야

재난발생 때 일반농작물 재배농민에게만 지원되는 농축산 경영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앞담배재배 농민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산정 때 담배 경작면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예규를 고쳐 담배경작면적도 피해를 산정에 적용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최근 권고했다. 그동안 재해 발생 시 지원받지 못한 앞담배 재배농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권익위는 농축산경영자금의 경우 일반농작물이든 앞담배 재배농민이든 차별 없이 대출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때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유독 담배 경작면적만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그간 일반농작물과 차별적 지원을 받아온 앞담배 재배농민들의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자 152명 구제

지난 2007년 10월 21일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한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2차 시험)에 152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개 문항에 대해 문제가 잘못됐거나 복수정답이므로 이 두 문항 때문에 응시자가 탈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권익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로 당시 총 17,145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지 못해 탈락한 15,923명중 152명이 추가로 합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청렴 컨설팅 무료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직접 무료 청렴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대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는 8.89점으로 '02년6.43점(10점 만점)에 비해 2.46점이나 개선되고, 금품과 향응 제공은 0.5%로 '02년 4.1%에 비해 대폭(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패인식도는 10점 만점에 3.3점으로 여전히 매우 낮고 '03년 2.9점에서 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들이 행정을 청렴하게 추진하고 자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장 실천가이드를 제작, 5월 30일 청렴교육장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80개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새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과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청렴컨설팅을 받고자하는 공공기관은 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에서 양식을 받아 6월내로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야간·아침 8시부터 정부민원 상담 가능해졌다

모든 정부민원을 평일 야간에도 전화로 상담·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평일 오후 7시까지이던 상담시간을 6월 13일부터 오후 10시로 늘려 야간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아침에도 상담시간을 1시간 당겨 오전 8시부터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 '110' 번을 누르면 ARS가 아닌 상담원이 직접 정부민원을 상담 및 안내해주는 서비스.

상담안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심야나 휴일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접수했다가 다음날 처리해주는 야간 및 휴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는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3곳의 지원을 받아 상담인과 상담원, 통역자 등이 3자 동시 통화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네팔, 말레이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민원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하려면 82-2-2012-9110로 걸면 된다.



전력설비 설치건물 피해복구는 시설주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이 전력공급을 위해 개인건물에 설치한 설비 때문에 건물 손상이 우려된다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강 조치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건물 소유주는 한전이 지난 1988년부터 자신의 건물 옥상과 벽체에 전력공급 설비(변압기 2대, 앵커볼트 고정 전력 케이블)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설치 및 가동하다가 최근 설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철거하게 되었지만, 이 설비로 인한 건물손상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조치를 해주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전측은 해당 설비가 민원인의 건물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며 거절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건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 민원인 건물이 수평방향의 외력에 대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도 벽체에 설치한 전력케이블을 수평방향으로 천공 후 앵커볼트로 고정시킨 점 ▲ 앵커볼트가 20년간 진행된 산화로 팽창된 점 ▲ 변압기 2대를 옥상에 설치할 당시 하중에 대한 건물 안전도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파악했다. 또한, 20년간 민원인 건물이 주변 전력공급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력설비로 인한 건물 손상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현역 군복무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해 줘야

대학(원)생들이 현역 군복무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이자 걱정 없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역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역사병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장교·하사관 등의 직업군인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상가 가로막은 녹지에 진·출입로 개설하라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황산교차로 인근에서 영업하는 중소상인 76명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상가 앞에 갑자기 생긴 260m 길이의 녹지공간 때문에 사고 위험률 증가는 물론, 도로에서 상가 진입이 어려워져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인근 2차선 도로를 넓히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주라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의견표명을 한 것이다.

녹지공간 조성 후 상인들은 상권보호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한국토지공사와 하남시 등에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지난 2월 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주변

상가의 영업을 위해 민원 지역에 접한 2차선 도로의 일정부분을 확장하고 진출입로를 만들어 지역상권을 보호해주고, 차량 분산효과로 교통장애와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 국무총리행심위 위원 15명 위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교수 5명, 변호사 9명, 공인노무사 1명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앞으로 2년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수 김선택 고려대 법대교수, 김창조 경북대 법대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대교수, 윤영미 고려대 법대교수, 최창귀 서울시립대 법대교수 ▲변호사 김세연, 김형성, 손태호, 오연균, 오진환, 이선희, 임영철, 임치용, 최일숙 ▲공인노무사 최미숙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식지 <국민권익>이 이번호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민권익>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책임입니다.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에 대한 칭찬부터 다소 미흡한 정보에 대한 따끔한 충고까지 어떤 내용이든지 <국민권익>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할 점이 있으면 우편, 이메일, 전화로 보내주세요. <국민권익>은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_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8층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실 <국민권익> 담당자 앞

Tel_ 02-360-2725

e-mail_ junmin79@acrc.go.kr



유엔 관계자들은 작은 규모의 부정부패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막고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널리 만연된 뇌물관행과 부정부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정부패는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아동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의 올라브 크유르벤 부사무총장은 정부 고위층이 저지르는 큰 규모의 부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작은 규모의 부정부패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유르벤 부사무총장은 가난한 사람들은 뇌물을 건넬 충분한 돈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교육이나 보건 같은 분야에서 최소한의 혜택이라도 받기 위해선 뇌물을 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크유르벤 부사무총장은 또 이렇게 크고 작은 공공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인과 각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크유르벤 부사무총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경찰 검문소나 동사무소 등 정부기관, 심지어 학교나 병원에서조차 뇌물을 건넬야만 필요한 서류를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곳들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크유르벤 부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개발이나 발전의 중재자나 격려자가 아닌 부패한 문제 집단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정부 자체의 존재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개발계획의 보고서는 사법체계에 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권고하고 정부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된 자금의 약 40%가 부정부패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개발계획은 이 보고서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패의 증가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선 총력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유엔 보고서

“부정부패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일러스트 홍종모



Tackling Corruption, Transforming lives

UN officials say small-scale corruption hits poor people hardest and strangles economic growth across Asia. Chad Bouchard reports from Jakarta.

Poor people in countries around the Asia-Pacific region are bombarded with illegal charges and bribes in their daily lives.

A new report released by the UN Development Program indicates that petty corruption perpetuates poverty and increases child mortality rates.

UNDP Assistant Secretary-General Olav Kjørvik says high-profile cases of corruption at the top levels of government should not take attention away from small-scale graft.

“Poor people are the ones who can least afford to pay bribes, but they find themselves that they have

no other choice in order to protect what little they have or to get access to at least some minimum social service, whether it’s education or health,” he said. “And so in addition to the resource transfer away from productive services for the public good at the macro-level, at the micro-level, it hurts individuals and families directly.”

Kjørvik says at police check points, government offices, and even schools and hospitals the poverty stricken pay extra for the services they need to sustain everyday life.

“Those are the areas where regular people need the government the most in their day-to-day lives” he said. “If the majority of the people see the government as just one big corrupt beast that is just there as a problem not as a catalyst or a facilitator for development, for progress, then the sustainability of the state itself becomes questionable.”

The report recommends rooting out corruption in the justice system as a top priority, and supports public access to financial information to keep governments honest.

As much as 40 percent of the funds for infrastructure projects across the region are lost due to bid rigging and other corruption, the UNDP said.

The report was released in Indonesia, where the country’s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says his country could be destroyed if corruption continues to grow. He has called for “shock therapy” to help root it out. 🌍



부패신고 1398

김 * 기린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